

인권아루소식

합본 19호

2002년
7월 ~ 12월



인권을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R1.1.19

사
랑
방

(월간2회 발행, 일·월요일 제외)

인권아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02-741-5365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제주 4·3에 대한 조명이 한창이다. 특히 올해가 4·3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한 논의와 자기 진행되고 있다.

자실상 4·3에 대한 논의가 폐금된 87년 6월 학생 이후, 그전까지 4·3은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였고, 학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원으로 분출된 민주화 연기는 4·3 학살규명작업을 본격화시켰고, 그 직후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거제만 10여 년간의 주춧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설과 미지로 묵어 있다.

한편 4·3의 진실규명과 관련해 시민 또 학내 위원회가 4·3 주도민의 문제로 국마시켜 적되고 있다. 〈제주학교〉에서는 "제주도가 전국 시민에게 안된다"는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고, 도민들은 4·3과 3·1 운동을 짚강하여 있다.

서 역사 "제주 4·3"을 민족사 대자본으로 읽어온 학생들은 4·3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떠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2125호 ~ 제2246호

합본 19호
(2002년 7월 ~ 12월)

인권을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19호

(제2125호 ~ 제2246호)

2003. 2

차례

부록 인권하우소식 합본 19호 색인

/263

제2125호(2002. 7. 2)

/1

- 1면 ·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 법무부 훈령으로n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 피해 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
2면 · <육아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2002년 7월 1일)

제2126호(2002. 7. 3)

/3

- 1면 · '신성한' 법원에선 과업 안돼? - 과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2면 · 국제형사재판소 '역사적' 출발 -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제2127호(2002. 7. 4)

/5

- 1면 · 미군측 발표 내용은 의문투성이 -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2면 · <이달의 인권> (2002년 6월)

제2128호(2002. 7. 5)

/7

- 1면 ·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 <만화사랑방>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미군의 '파렴치한 불꽃놀이'
2면 ·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 대안 전 입법의원 "현대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 사과

제2129호(2002. 7. 6)

/9

- 1면 · 10기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 검찰, 김형주 의장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2면 ·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협안

제2130호(2002. 7. 9)

/11

- 1면 ·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 검찰 출두 안 시켜

- 2면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그들은 알고 있을까?
· <주간인권흐름> (7월 1일 ~ 7월 8일)
- 제2131호(2002. 7. 10)** /13
- 1면 ·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클릭! 인권정보자료>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
- 2면 · <기획>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①
-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
- 제2132호(2002. 7. 11)** /15
- 1면 ·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략 -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정윤기 검사의 사건은 폐 규탄한다" -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키로
- 2면 ·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공청회
· 법무부, 미군에 재판권 포기 요청 -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걸치례 검찰 출두
- 제2133호(2002. 7. 12)** /17
- 1면 ·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
· <만화사랑방> 검찰, 한총련 의장 또 기소
- 2면 ·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 반대 -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
- 제2134호(2002. 7. 13)** /19
- 1면 ·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2면 ·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 공청회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제2135호(2002. 7. 16)** /21
- 1면 · 에바다 민주 이사진, 농아원 진입 - 옛 재단 쪽 직원과 원생, 폭력 행사 되풀이
·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2면 ·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주간인권흐름> (7월 8일 ~ 7월 15일)
- 제2136호(2002. 7. 17)** /23
- 1면 ·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클릭! 인권정보자료> 「벼랑 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 2면 · <기획>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②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의산역 폭격'
- 제2137호(2002. 7. 19)** /25
- 1면 ·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 제2138호(2002. 7. 20)** /27
- 1면 ·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 합법화투쟁
·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2면 ·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제2139호(2002. 7. 23)** /29
- 1면 ·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2면 · <주간인권흐름> (7월 15일 ~ 7월 22일)
- 제2140호(2002. 7. 24)** /31
- 1면 ·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로도 투표
· <클릭! 인권정보자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2면 · <기획>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③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제2141호(2002. 7. 25)** /33
- 1면 · <한국사회 이해> 항소심도 무죄 -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 2면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제2142호(2002. 7. 26)** /35
- 1면 ·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 <만화사랑방> 한국사회 이해 무죄 판결, 그러나 국보법에 의한 자기검열 계속
- 2면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② 부당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제2143호(2002. 7. 27)** /37
- 1면 ·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 <논평>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2면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③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 제2144호(2002. 7. 30)** /39
- 1면 · 김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없다?
- 2면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주간인권흐름> (7월 22일 ~ 7월 29일)

제2145호(2002. 7. 31)

/41

- 1면 ·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2면 · <기획>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④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해설> 보도연맹 사건

제2146호(2002. 8. 1)

/43

- 1면 ·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 서울시청, ‘공개사과 못한다’ - 빌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 요구 농성
- 2면 ·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제2147호(2002. 8. 2)

/45

- 1면 ·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협조했다”
· <만화사랑방> 전두환 납량특집 - “삼청교육대” 관련 진상조사할테니 준비해주세요”
- 2면 ·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 노동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자료> 현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제2148호(2002. 8. 3)

/47

- 1면 ·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2면 · 열손가락 지문, 주인에게 돌려달라 -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거부 취소’ 행정소송
·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제2149호(2002. 8. 6)

/49

- 1면 ·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살아서 일하고 싶다” -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열차에 치어 사망
- 2면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주간인권흐름> (7월 29일 ~ 8월 5일)

제2150호(2002. 8. 7)

/51

- 1면 ·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
- 2면 · <기획>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⑤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제2151호(2002. 8. 8)

/53

- 1면 · 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 “국정원 환골탈태 기회 스스로 포기”
·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 “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 2면 · <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오태양)

제2152호(2002. 8. 9)

/55

- 1면 · 의문사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
· 인권체험하며 생각도 쑥쑥 - 장대비 속, 어린이 인권캠프
· <만화사랑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위험하긴 마찬가지~
- 2면 ·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제2153호(2002. 8. 10)

/57

- 1면 · 복직투쟁 2년, 고공농성 끝 결실 - 중앙일보 인쇄 해고 노동자 순차적 복직 합의
· <논평> 사면의 역설
- 2면 ·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김병수)

제2154호(2002. 8. 13)

/59

- 1면 ·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 국가인권위, 출입국 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이동권보장 요구, 장애인 단식 시작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빌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 2면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주간인권흐름> (8월 5일 ~ 8월 11일)

제2155호(2002. 8. 14)

/61

- 1면 · 국회의원 소유 사업장, ‘용역깡패’ 동원 - 서울온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
- 2면 · <기획>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⑥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제2156호(2002. 8. 15)

/63

- 1면 ·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만화사랑방> 강제해산 철거 때마다 보이는 ‘용역…깡패’
- 2면 ·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 양심수 1천5백여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책읽기> 「서준식 옥중서한 1971~1988」

제2157호(2002. 8. 20)

/65

- 1면 ·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2면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주간인권흐름> (8월 12일 ~ 8월 19일)

제2158호(2002. 8. 21)

- 1면 ·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2면 ·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제2159호(2002. 8. 22)

- 1면 ·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 외국투자기업에 과연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클릭! 인권정보자료> 「유엔과 인권 꾸러미」
 2면 · <기획>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⑦ 산청학살, “지리산 자락에 산 게 죄였다”

제2160호(2002. 8. 23)

- 1면 ·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만화사랑방>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한 연장! 권~한 강화!
 2면 ·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
 ·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 당시 보안사 담당자(현 기무사), “자료목록 영구보존”

제2161호(2002. 8. 24)

- 1면 ·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 회유·협박 안 되자, 4백만원 벌금 청구
 ·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2면 ·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용어설명> 청원제도란?

제2162호(2002. 8. 27)

- 1면 ·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2면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주간인권흐름>(8월 19일 ~ 8월 26일)

제2163호(2002. 8. 28)

- 1면 ·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클릭! 인권정보자료>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2면 · <기획>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⑧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제2164호(2002. 8. 29)

- 1면 ·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
 · 경제특구 ‘망상’, 전국화산 위험 -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2면 · 17일째 ‘장애인인동권’ 쟁취 단식 농성 중인 최재호 씨를 만나 - “성과 못 내더라도 후회없이 싸울 생각”
 · <국제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연대 한발짝 앞으로

/67

제2165호(2002. 8. 30)

- 1면 ·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만화사랑방> 이명박 시장님 ~ 이런 사진도 좀 찍어보시죠?
 2면 ·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4명, 시의회 기습 시위
 ·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제2166호(2002. 8. 31)

- 1면 ·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 씨 ‘공개수배’ - 자료제출 거부, 소각 후 잠적
 · <논평>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된다
 2면 · <이달의 인권> (2002년 8월)

제2167호(2002. 9. 3)

- 1면 ·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밝힙니다
 2면 ·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
 · <주간인권흐름> (8월 26일 ~ 9월 2일)

제2168호(2002. 9. 4)

- 1면 · 밭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사과·피해보상조치 필요”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 - 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으랏차차 힘찬 인권이야기』
 2면 ·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제2169호(2002. 9. 5)

- 1면 ·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써도 이적? - 한청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행
 ·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
 2면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제2170호(2002. 9. 6)

- 1면 ·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만화사랑방> 열심히 일한 당신 ~ 외국인노동자 떠나라?
 2면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제2171호(2002. 9. 7)

- 1면 ·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없다 -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2면 ·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 최재호씨 실신 - 버스타기 행사 중…박경석 대표도 상태 악화
 ·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81

/83

/85

/87

/89

/91

/93

· 인권하루소식 창간 9주년 축사 - <다산인권> 송원찬, <평화와 인권> 서미숙

제2172호(2002. 9. 10)

/95

- 1면 ·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 씨 사망 -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죽음까지 몰고 온 노점상 단속 - 노점상 박봉규 씨, 6일 사망
2면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함께 갑시다
· <주간인권흐름> (9월 2일 ~ 9월 10일)

제2173호(2002. 9. 11)

/97

- 1면 ·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용’ 조항 위헌제청
· <기획>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2면 · <기획>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⑨ <마지막>
파리떼로 덮었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제2174호(2002. 9. 12)

/99

- 1면 ·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 일관
·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2면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제2175호(2002. 9. 13)

/101

- 1면 · ‘병역비리’ 정국, 병역 거부 확산 -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브래지어가 자살용 물건? - 피의자 인격권, 행정편의보다 우선돼야
2~3면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제2176호(2002. 9. 14)

/104

- 1면 ·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 안하무인 한국까르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2면 · 모의헌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 귀화결심한 외국인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기획> 쟁점! 주5일근무제 ② 총노동시간, 노동자들 등골 훤판

제2177호(2002. 9. 17)

/106

- 1면 ·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 “이대로 멈출 수 없다”…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2면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주간인권흐름> (9월 9일 ~ 9월 16일)

제2178호(2002. 9. 18)

/108

- 1면 ·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위, 비전향 장기수 옥사사건 결정 공표
· <해설> 사회안전법이란?
· <기획> 쟁점! 주5일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2면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제2179호(2002. 9. 19)

/110

- 1면 ·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2면 · <기획> 쟁점! 주5일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 이동권연대 엄태근 국장 체포 - 장애인단식농성 38일 경과
· <만화사랑방> 공무원노조를 ‘노조’라 부르지 마라?

호외 (2002. 9. 19)

/112

- 1면 ·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 승리 -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
···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2면 · 결연한 의지 다진 기자회견 -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요지
·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관련 투쟁 및 국가인권위원회 무기한 단식 농성 경과

제2180호(2002. 9. 24)

/114

- 1면 ·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 왜곡 물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 <기획> 쟁점! 주5일근무제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
2면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 <주간인권흐름> (9월 16일 ~ 9월 23일)

제2181호(2002. 9. 25)

/116

- 1면 ·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클릭! 인권정보자료>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2면 · <기획> 쟁점! 주5일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제2182호(2002. 9. 26)

/118

- 1면 ·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기획>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공개 안전
3면 · <전원위원회 비공개 안전
-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제2183호(2002. 9. 27)

/121

- 1면 ·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 철도노동자 추락사…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
· <만화사랑방> 경찰의 지문날인 통계자료 왜곡 - “경찰들만 ‘지문날인’하면 되겠구만~!”

- 2면 ·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 참정권 보장 서명운동 나서, 주민중 미발급자 52만여명

제2184호(2002. 9. 28)

/123

- 1면 ·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2면 · <기획> 쟁점! 주5일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영상보고서

제2185호(2002. 10. 1)

/125

- 1면 ·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2면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 :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
· <주간인권흐름> (9월 23일 ~ 9월 29일)

제2186호(2002. 10. 2)

/127

- 1면 ·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 조사 결과...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2면 ·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제2187호(2002. 10. 3)

/129

- 1면 ·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촉구 농성 - 단식 8일째, 보건의료노동자 1명 탈진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원칙」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3면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제2188호(2002. 10. 5)

/132

- 1면 ·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2면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제2189호(2002. 10. 8)

/134

- 1면 ·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빌등의 불
2면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감추어진 세계
· <주간인권흐름> (9월 30일 ~ 10월 7일)

제2190호(2002. 10. 9)

/136

- 1면 ·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2면 ·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 "정부가 이주노동자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 될 것"
·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 해

제2191호(2002. 10. 10)

/138

- 1면 ·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 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제2192호(2002. 10. 11)

/140

- 1면 ·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만화사랑방> 아프간 공격 1년, 부시 이라크 공격 준비
2면 ·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 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

제2193호(2002. 10. 12)

/142

- 1면 · "전두환, 녹화사업 지시" 추정가능 문서 나와 - 의문사위, 전두환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2면 ·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 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
· 겨울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제2194호(2002. 10. 15)

/144

- 1면 ·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알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2면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인권의 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주간인권흐름> (10월 7일 ~ 10월 14일)

제2195호(2002. 10. 16)

/146

- 1면 ·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 의문사위,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 권고
·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2면 ·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제2196호(2002. 10. 17)

/148

- 1면 ·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제2197호(2002. 10. 18)

/150

- 1면 ·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만화사랑방> 수배전단에 주민번호를 공개하다니!
- 2면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 과일 값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

제2198호(2002. 10. 19)

/152

- 1면 ·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2면 ·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 공청회…‘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제2199호(2002. 10. 22)

/154

- 1면 ·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 공연 외 풀뽑기·청소, 임금 2백달러 미달
·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2면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주간인권흐름> (10월 14일 ~ 10월 21일)

제2200호(2002. 10. 23)

/156

- 1면 ·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 관련기관, 1년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장애인은 함께 공부하고 싶다”
- 2면 ·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상) -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제2201호(2002. 10. 24)

/158

- 1면 ·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해설> 호주제와 현 호적제의 문제
- 2면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강제실시 길라잡이 -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종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 방패

제2202호(2002. 10. 25)

/160

- 1면 ·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만화사랑방> 아프리카 민속공연단 초청 대한민국 특별공연! - 대운동장 풀뽑기 강제노역
- 2면 ·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제2203호(2002. 10. 26)

/162

- 1면 ·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2면 ·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 개선 심포지움 -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제2204호(2002. 10. 29)

/164

- 1면 ·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2면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 <주간인권흐름> (10월 21일 ~ 10월 28일)

제2205호(2002. 10. 30)

/166

- 1면 ·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클릭! 인권정보자료>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2면 ·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 민주노총, 근기법 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 촉구
·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제2206호(2002. 10. 31)

/168

- 1면 ·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 인터뷰

제2207호(2002. 11. 1)

/171

- 1면 ·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이어져
·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 <만화사랑방> 국회를 향한 ‘힘읍고 빼웁는 민초들’의 분노
- 2면 ·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 대부분 갈 곳 없는 노인들, 구청이 거리로 내몰아
·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3면 · <이달의 인권> (2002년 10월)

제2208호(2002. 11. 2)

/174

- 1면 ·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2면 ·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 사회단체, 3대악법 폐기 촉구 한 목소리 -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회생시킨다”
·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 직장감시카메라에 대한 대응지침 등도 소개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⑤ 인권학교 참가, 실천으로 이어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209호(2002. 11. 5)

/176

- 1면 ·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의문사위의 수사제도 개선 권고 중
· 사회단체, 의문사법 개정 촉구 -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 권한 부여'
- 2면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주간인권흐름> (10월 28일 ~ 11월 3일)

제2210호(2002. 11. 6)

/178

- 1면 ·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 회피 -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 2면 ·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현재 위헌결정 무색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제2211호(2002. 11. 7)

/180

- 1면 ·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세번째 반딧불> 신의 아이들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남편사별 중국동포 -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제2212호(2002. 11. 8)

/182

- 1면 ·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 <만화사랑방> 검찰 피의자 고문사망, 청송보호감호소 열악한 처우, 경찰 시민오발 사망
- 2면 ·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
· 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배상 판결

제2213호(2002. 11. 9)

/184

- 1면 ·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2면 ·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하고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 <울림>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시작된다
- 3면 ·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 ICC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제2214호(2002. 11. 12)

/187

- 1면 ·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2면 · 한국정부는 답하라 -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 관련 질문 제기
· <주간인권흐름> (11월 4일 ~ 11월 11일)

제2215호(2002. 11. 13)

/189

- 1면 ·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2면 · 남편사별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 한국정부도, 중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제2216호(2002. 11. 14)

/191

- 1면 · "우리 쌀을 지키자" - 여의도별, 십만 농민 합성 가득
· "경제자유구역안은 헌법에 위배" -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제2217호(2002. 11. 15)

/193

- 1면 · 경제자유구역=노동착취 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만화사랑방> 뿌리채 뽑히는 농심…
- 2면 ·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 통과 -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전주교도소,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반입 불허 -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제2218호(2002. 11. 16)

/195

- 1면 ·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2면 ·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인권교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

제2219호(2002. 11. 19)

/197

- 1면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사회단체
·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2면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민관·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주간인권흐름> (11월 11일 ~ 11월 18일)

제2220호(2002. 11. 20)

/199

- 1면 ·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클릭! 인권정보자료> 「형평운동의 재인식」
- 2면 ·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빼죽'

·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제2221호(2002. 11. 21)

/201

- 1면 ·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벼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혁혁' -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과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양콜공연

제2222호(2002. 11. 22)

/203

- 1면 ·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 각계 분노·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만화사랑방> 미군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라네?
2면 ·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21일 아침 320호 법정
·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 국가인권위, 발산역 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제2223호(2002. 11. 23)

/205

- 1면 ·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2면 ·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을 낮춰야”
· <해설> 소득인정액제란?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투명해야

제2224호(2002. 11. 26)

/207

- 1면 · 고문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2면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 <주간인권흐름> (11월 18일 ~ 11월 25일)

제2225호(2002. 11. 27)

/209

- 1면 ·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도 간접피해 인정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2면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범대위(준) 발족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

제2226호(2002. 11. 28)

/211

- 1면 ·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분노하는 당신, 행동하라! - 제1차 시국대회, 미군의 무죄평결 관련 범국민 행동지침 발표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3면 · ~2면에서 계속
4·5면 · 인권하루소식 2002 인권 10대 소식 설문지

제2227호(2002. 11. 29)

/216

- 1면 ·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
· <만화사랑방> 인권대통령이라면 경제자유구역법안에 거부권을!
2면 ·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죄고 사형은 위헌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⑦ YMCA 아동인권센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 집회 참가 여성 성추행 당해 - 전주노동사무소의 공개사과 촉구

제2228호(2002. 11. 30)

/218

- 1면 ·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2면 ·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제2229호(2002. 12. 3)

/221

- 1면 · 전국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2면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
· <주간인권흐름> (11월 25일 ~ 12월 2일)

제2230호(2002. 12. 4)

/223

- 1면 ·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 받아
· <클릭! 인권정보자료> 정보화시대의 인권① 「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2면 ·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없는 한국을 꿈꾼다! -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제2231호(2002. 12. 5)

/225

- 1면 ·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부천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제2232호(2002. 12. 6)

/227

- 1면 ·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만화사랑방>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2면 ·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 <네번째 반딧불> 20세기 세계혁명의 기록 '붉은 대기'

제2233호(2002. 12. 7)

/229

- 1면 ·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2면 ·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제2234호(2002. 12. 10)

/231

- 1면 ·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소파개정 촉구, 종교계 기도회 줄이어
- 2면 ·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주간인권흐름> (12월 2일 ~ 12월 9일)
- 3·4·5면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 인권 10대 소식

제2235호(2002. 12. 11)

/236

- 1면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 증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클릭! 인권정보자료> 정보화시대의 인권②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 2면 ·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제2236호(2002. 12. 12)

/238

- 1면 ·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 14일 '주권회복의 날'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면 ·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제2237호(2002. 12. 13)

/241

- 1면 · 중대범죄에 대해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만화사랑방> 반미시위 확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 2면 ·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 미등록 신분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제2238호(2002. 12. 14)

/243

- 1면 ·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2면 ·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제2239호(2002. 12. 17)

/245

- 1면 ·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교육은?
- 2면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왜 나는 큰 일에만 분노하는가

- <주간인권흐름> (12월 9일 ~ 12월 16일)

제2240호(2002. 12. 18)

/247

- 1면 ·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 "냉전적 국가 신고체제, 대민 불신만 조장"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2면 ·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시행

제2241호(2002. 12. 19)

/249

- 1면 ·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 돼! -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사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 <만화사랑방> '집시법'은 고무줄이야~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

제2242호(2002. 12. 21)

/251

- 1면 ·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2면 ·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 서울 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제2243호(2002. 12. 24)

/253

- 1면 ·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2면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한다
· <주간인권흐름> (12월 16일 ~ 12월 23일)

제2244호(2002. 12. 25)

/255

- 1면 · "성모병원, 대화에 나서길" - 병원노동자, 성탄절 맞아 2박3일 노숙농성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2면 ·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유엔 심사 앞두고 '유엔아동권리협약 간담회' 열려

제2245호(2002. 12. 27)

/257

- 1면 · 법무부 형법·형소법 개정안 반대 빗발 - 수사편의 위주, 인권보장 뒷전
· 보건의료노동자 파업 종료
- 2면 ·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

제2246호(2002. 12. 28)

/259

- 1면 ·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2면 · <만화사랑방> 2002 인권 10대 뉴스

3면 ·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19호 색인

/263

인권하루소식

2002년 7월

(제2125호 ~ 제2145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9호 색인

색인 찾아보기

<p><경제·사회·문화적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264-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노동 · 노동권·노동조건 ···노동자 감시 ···노동건강 ···노동조합결성권·교섭·파업권 교수노조/공무원노조 ···'노동 일반' 관련 사례 택시/발전/보건의료/삼성 생존권/빈곤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점상 단속 사회복지/사회보장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권 /266-267 건강권 /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리벡 교육권 /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문화 /267-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과 인권 생명권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문·가혹행위 /268-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 경찰폭력 · 군폭력 · 의문사 · 용역깡패 · 기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프라이버시 /269-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감시 · 사찰/ 도청/ 감청 · 지문날인 사상·양심의 자유 /270-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서약/사상전향제도 ·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김강필 씨 사건 ···조작간첩 사건 · 보안관찰법 · 장기수·양심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p>표현의 자유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p> <p>집회·결사의 자유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한총련 </p> <p><소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노동자 /273 외국인 /273 난민 /273 재외동포 /274 여성 /2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 성매매 · 여성노동권 어린이·청소년 /274-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체벌 ···청소년 노동 장애인 /275-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권 ···교육권 탈북자 /276 동성애자 /276 성전환자 /276 노숙인 /276 <p><시민·정치적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인권기구 /276-277 국제행사법원(재판소) /277 지역인권상황 /2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미국 <p><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구와 인권 /278-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정보원 · 경찰 · 검찰 · 법원 · 군 · 기무사 시설수용자와 인권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바다 사건(청각장애인 시설) · 외국인보호소 감옥·유치장 수용자와 인권 /280-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감호제 <p><특별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평 /288 인권이야기 /288-289 만화사랑방 /290 인권정보자료 /290-291 인권영화 /291 주민인권흐름 /291-292 이달의 인권 /292 기타 /292 <p><인권하루소식 고정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자유주의와 인권 /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화 · 경제특별구역(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협정 / 농산물 수입개방 미국과 인권 /281-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과 인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과거 청산/불처벌 /282-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 삼청교육대 ·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비전향 장기수 옥사 사건 ···김준배 사건 ···허원근 사건 ···녹화사업 ···조작 사건 ·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인권교육 /285 평화 /286 인권활동가 /286 <p><기획> /286-2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을 가다 ·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 쟁점! 주5일 근무제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 <국제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연대 한발짝 앞으로(8. 29 2면 2164호) /80

노동

▷ 비정규노동

-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략 -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7. 11 1면 2132호) /15
-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7. 16 2면 2135호) /22
-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9. 25 1면 2181호) /116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10. 9 1면 2190호) /136

▷ 노동권 · 노동조건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7. 25 2면 2141호) /34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② 부당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7. 26 2면 2142호) /36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③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7. 27 2면 2143호) /38
-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8. 22 2159호) /69
-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없다 -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9. 7 1면 2171호) /93
- 쟁점! 주5일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9. 11 1면 2173호) /97
- 쟁점! 주5일근무제 ② 총노동시간, 노동자들 등골 훤판다(9. 14 2면 2176호) /105
- 쟁점! 주5일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파근로 원한다?"(9. 18 1면 2178호) /108
- 쟁점! 주5일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9. 19 2면 2179호) /111
- 쟁점! 주5일근무제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9. 24 1면 2180호) /114
- 쟁점! 주5일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9. 25 2면 2181호) /117
- 쟁점! 주5일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9. 26 1면 2182호) /118
- 쟁점! 주5일근무제 ⑧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9. 28 2면 2184호) /124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 :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10. 1 2면 2185호) /126
-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10. 11 1면 2192호) /140
-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 공청회·'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10. 19 2면 2198호) /153
-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10. 19 2면 2198호) /153
-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 민주노총, 근기법 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 촉구(10. 30 2면 2205호) /167
-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11. 1 1면 2207호) /171
- 사회단체, 3대악법 폐기 촉구 한 목소리 - "국민의 사회 · 민주적 권리 회생시킨다"(11. 2 2면 2208호) /175
-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 공무원조합법 · 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11. 6 1면 2210호) /178

▷▷ 노동자 감시

-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 노동단체, 대웅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8. 2 2면 2147호) /46

▷▷ 노동건강

-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7. 13 1면 2134호) /19
- "살아서 일하고 싶다" -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열차에 치어 사망(8. 6 1면 2149호) /49
-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 철도노동자 추락사…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9. 27 1면 2183호) /121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인권의 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10. 15 2면 2194호) /145
-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10. 19 2면 2198호) /153

▷ 노동조합결성권 · 교섭 · 파업권

-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잡시법 적용(7. 3 1면 2126호) /3
-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7. 16 1면 2135호) /21
-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 정부, 폭력사태 · 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8. 6 1면 2149호) /49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8. 6 2면 2149호) /50
- 국회의원 소유 사업장, '용역깡패' 동원 - 서울온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8. 14 1면 2155호) /61
- 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배상 판결(11. 8 2면 2212호) /183

▷▷ 교수노조

-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략 -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7. 11 1면 2132호) /15

▷▷ 공무원노조

- <만화사랑방> 공무원노조를 '노조'라 부르지 마라?(9. 19 2면 2179호) /111
-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10. 5 2면 2188호) /133
-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 집회금지 · 서울행 원천봉쇄 · 무더기 연행(10. 19 1면 2198호) /152
-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 민주노총, 근기법 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 촉구(10. 30 2면 2205호) /167
-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10. 30 2면 2205호) /167
-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11. 1 1면 2207호) /171
-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 공무원조합법 · 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11. 6 1면 2210호) /178

▷▷ '노동 일반' 관련 사례

- 복직투쟁 2년, 고공농성 끝 결실 - 중앙일보 인쇄 해고 노동자 순차적 복직 합의(8. 10 1면 2153호) /57
-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 안하무인 한국까르푸…노조, 파업 1백15일째(9. 14 1면 2176호) /104
-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11. 2 1면 2208호) /174

▷▷▷ 택시

-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7. 26 1면 2142호) /35

▷▷▷ 발전

-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7. 12 2면 2133호) /18
-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7. 20 2138호) /28
- <클릭! 인권정보자료>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7. 31 1면 2145호) /41

▷▷▷ 보건의료산업

-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8. 6 1면 2149호) /49
-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9. 4 2면 2168호) /88
-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9. 14 1면 2176호) /104
-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촉구 농성 - 단식 8일째, 보건의료노동자 1명 탈진(10. 3 1면 2187호) /129
-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10. 17 1면 2196호) /148
-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11. 16 1면 2218호) /195
- “성모병원, 대화에 나서길” - 병원노동자, 성탄절 맞아 2박3일 노숙농성(12. 25 1면 2244호) /255
- 보건의료노동자 파업 종료(12. 27 1면 2245호) /257

▷▷▷ 삼성

- <클릭! 인권정보자료> 「벼랑 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7. 17 1면 2136호) /23
-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 회유·협박 안 되자, 4백만원 벌금 청구(8. 24 1면 2161호) /73

생존권/빈곤

▷ 노점상 단속

-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8. 29 1면 2164호) /79
- 죽음까지 몰고 온 노점상 단속 - 노점상 박봉규 씨, 6일 사망(9. 10 1면 2172호) /95
-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11. 9 1면 2213호) /184

사회복지/사회보장

-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11. 23 2면 2223호) /206
- <해설> 소득인정액제한?(11. 23 2면 2223호) /206

주거권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8. 6 2면 2149호) /50
-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 대부분 갈 곳 없는 노인들, 구청이 거리로 내몰아(11. 1 2면 2207호) /172
-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11. 28 1면 2226호) /211

- 부천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12. 5 1면 2231호)

건강권

-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 6 2면 2129호) /10
-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 반대 -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7. 12 2면 2133호) /18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11. 19 2면 2219호) /198
-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 미등록 신분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12. 1 4 2면 2237호) /242

▷ 글리벡

-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 의약품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7. 19 2면 2137호) /26
-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8. 3 2면 2148호) /48
-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8. 14 1면 2155호) /61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9. 17 2면 2177호) /107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강제실시 길라잡이 -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10. 24 1면 2201호) /158

교육권

-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7. 27 1면 2143호) /37
-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8. 23 2면 2160호) /72
-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 해(10. 9 2면 2190호) /137
-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10. 11 1면 2192호) /140
-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 공청회…‘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10. 19 2면 2198호) /153
-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10. 26 1면 2203호) /162
-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10. 26 1면 2203호) /162
-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빼죽’(11. 20 2면 2220호) /200
-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12. 5 1면 2231호) /225
-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12. 7 2면 2233호) /230

과학·문화

-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김병수)(8. 10 2면 2153호) /58

▷ 지적재산권과 인권

-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 의약품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7. 19 2면 2137호) /26
- <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7. 23 2면 2139호) /29
-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8. 3 2면 2148호) /48
-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8. 14 1면 2155호) /61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9. 17 2면 2177호)	/107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강제실시 길라잡이 -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10. 24 1면 2201호)	/158

시민 · 정치적 권리

생명권

·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김병수)(8. 10 2면 2153호)	/58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8. 27 2면 2162호)	/76
·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11. 28 1면 2226호)	/211
· 부천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12. 5 1면 2231호)	/225

고문 · 가혹행위

▷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11. 2 1면 2208호)	/174
·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11. 5 1면 2209호)	/176
· 의문사위의 수사제도 개선 권고 중(11. 5 1면 2209호)	/176
·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11. 9 1면 2213호)	/184
· 고문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11. 26 1면 2224호)	/207
·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시행(12. 18 2면 2240호)	/248
· 법무부 형법 · 형소법 개정안 반대 빗발 - 수사편의 위주, 인권보장 뒷전(12. 27 1면 2245호)	/257

▷ 경찰폭력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그들은 알고 있을까?(7. 9 2면 2130호)	/12
·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7. 16 1면 2135호)	/21
· 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배상 판결(11. 8 2면 2212호)	/183

▷ 진주 총기사고

·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7. 3 1면 2126호)	/3
---	----

▷ 군폭력 · 의문사

·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 “증대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8. 21 1면 2158호)	/67
· 군내 가혹행위 비판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9. 28 2면 2184호)	/124
·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 진술 · 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10. 10 1면 2191호)	/138

· 국회의원 소유 사업장, ‘용역깡패’ 동원 - 서울온천, 노동자 고용승계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8. 14 1면 2155호)	/61
·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8. 29 1면 2164호)	/79
·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11. 9 1면 2213호)	/184

▷ 기타

· <논평>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쳐(7. 27 1면 2143호)	/37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11. 9 2면 2213호)	/185
·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11. 13 1면 2215호)	/189
·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11. 16 1면 2218호)	/19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피의자 · 피고인의 권리

· <자료> 현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8. 2 2면 2147호)	/46
· 브래지어가 자살용 물건? - 피의자 인격권, 행정편의보다 우선돼야(9. 13 1면 2175호)	/101
· “국가보안법 · 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 · 재정신청제 확대 · 특검제 상설화 등(11. 12 1면 2214호)	/187
·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11. 16 1면 2218호)	/195
·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시행(12. 18 2면 2240호)	/248
· 학생 · 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 돼! -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사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12. 19 1면 2241호)	/249
· 법무부 형법 · 형소법 개정안 반대 빗발 - 수사편의 위주, 인권보장 뒷전(12. 27 1면 2245호)	/257

프라이버시

·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 6 2면 2129호)	/10
·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 반대 -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7. 12 2면 2133호)	/18
·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9. 27 2면 2183호)	/122
·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11. 23 1면 2223호)	/205
·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12. 7 1면 2233호)	/229
·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12. 7 2면 2233호)	/231

▷ 노동자 감시

·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7. 13 1면 2134호)	/19
·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 노동단체, 대웅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8. 2 2면 2147호)	/46

·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10. 16 2면 2195호)	/147
· <만화사랑방> 수배전단에 주민번호를 공개하다니!(10. 18 1면 2197호)	/150
·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 직장감시카메라에 대한 대응지침 소개(11. 2 2면 2208호)	/175

▷ 사찰/ 도청/ 감청

·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7. 30 1면 2144호)	/39
·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12. 7 1면 2233호)	/229

▷ 지문날인

·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판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로도 투표(7. 24 1면 2140호)	/31
· 열손가락 지문, 주인에게 돌려달라 -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거부 취소’ 행정소송(8. 3 2면 2148호)	/48
·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8. 28 1면 163호)	/77
·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용’ 조항 위헌제청(9. 11 1면 2173호)	/97
·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 귀화결심한 외국인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9. 14 2면 2176호)	/105
·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 왜곡 물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9. 24 1면 2180호)	/114
· <만화사랑방> 경찰의 지문날인 통계자료 왜곡 - “경찰들만 ‘지문날인’하면 되겠구만~!”(9. 27 1면 2183호)	/121
·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 참정권 보장 서명운동 나서, 주민증 미발급자 52만여명(9. 27 2면 2183호)	/122
·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11. 15 2면 2217호)	/194
·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11. 16 2면 2218호)	/196
·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12. 7 2면 2233호)	/230

사상·양심의 자유

▷ 준법서약/사상전향제도

·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8. 30 1면 2165호)	/81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9. 5 2면 2169호)	/90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9. 6 2면 2170호)	/92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9. 12 2면 2174호)	/100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9. 13 2면 2175호)	/102~103
·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위, 비전향 장기수 옥사사건 결정 공표(9. 18 1면 2178호)	/108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10. 17 2면 2196호)	/149

▷ 국가보안법

·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7. 10 1면 2131호)	/13
· “국보법 철퇴”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10. 22 1면 2199호)	/154
· 국보법 7조 친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11. 29 2면 2227호)	/217

·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11. 30 1면 2228호)	/218
--------------------------------------	------

▷▷ 관련 사건

·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 검찰, 김형주 의장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7. 6 1면 2129호)	/9
·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8. 24 2면 2161호)	/74
·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써도 이적? - 한청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행(9. 5 1면 2169호)	/89

▷▷▷ 한국사회의 이해

·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7. 25 1면 2141호)	/33
· <만화사랑방>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 판결, 그러나 국보법에 의한 자기검열 계속(7. 26 1면 2142호)	/35

▷▷▷ 김강필 씨 사건

·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7. 31 1면 2145호)	/41
·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8. 3 1면 2148호)	/47
·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21일 아침 320호 법정(11. 22 2면 2222호)	/204
·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12. 6 2면 2232호)	/228

▷▷ 조작간첩 사건

·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8. 9 2면 2132호)	/56
--	-----

▷ 보안관찰법

·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11. 12 1면 2214호)	/187
--	------

▷ 장기수·양심수

·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 양심수 1천5백여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8. 15 2면 2156호)	/64
·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12. 11 2면 2235호)	/237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7. 5 2면 2128호)	/8
·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7. 9 1면 2130호)	/11
· <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오태양)(8. 8 2면 2151호)	/54
· ‘병역비리’ 정국, 병역 거부 확산 -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9. 13 1면 2175호)	/101
·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10. 1 1면 2185호)	/125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종인 종교집회 허용하라”(10. 24 2면 2201호)	/159
·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12. 11 2면 2235호)	/237
·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12. 18 2면 2240호)	/248

표현의 자유

-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9. 28 1면 2184호) /123
-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 <주민증> · <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10. 12 2면 2198호) /143
-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10. 22 1면 2199호) /154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8. 3 1면 2148호) /47
- <만화사랑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위험하긴 마찬가지~(8. 9 1면 2152호) /55
-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8. 15 1면 2156호) /63
-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현재 위헌결정 무색(11. 6 2면 2210호) /179

집회·결사의 자유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7. 3 1면 2126호) /3
-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10. 15 1면 2194호) /144
-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10. 19 1면 2198호) /152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11. 8 2면 2212호) /183
-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12. 14 2면 2238호) /244
- <만화사랑방> '집시법'은 고무줄이야~(12. 19 1면 2241호) /249

▷ 한총련

-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 검찰, 김형주 의장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7. 6 1면 2129호) /9
-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7. 10 1면 2131호) /13
- "정유기 검사의 사건은폐 규탄한다" -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키로(7. 11 1면 2132호) /15
- <만화사랑방> 검찰, 한총련 의장 또 기소(7. 12 1면 2133호) /17
-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 합법화투쟁(7. 20 1면 2138호) /27
-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7. 20 1면 2138호) /27
-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8. 24 2면 2161호) /74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11. 6 2면 2210호) /179

소수자

이주노동자

- <클릭! 인권정보자료>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7. 10 1면 2131호) /13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7. 30 2면 2144호) /40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8. 27 2면 2162호) /76
-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9. 3 1면 2167호) /85
- <만화사랑방> 열심히 일한 당신~ 외국인노동자 떠나라?!(9. 6 1면 2170호) /91
-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9. 7 1면 2171호) /93
-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9. 7 2면 2171호) /94
-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 "정부가 이주노동자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 될 것"(10. 9. 2190호) /137
-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 공연 외 풀뽑기·청소, 임금 2백달러 미달(10. 22 1면 2199호) /154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10. 22 2면 2199호) /155
- <만화사랑방> 아프리카 민족공연단 초청 대한민국 특별공연! - 대운동장 풀뽑기 강제노역(10. 25 1면 2202호) /160
-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11. 1 2면 2207호) /172
-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11. 19 1면 2219호) /197
-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없는 한국을 꿈꾼다! -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12. 4 2230호) /224
-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12. 5 1면 2231호) /225
-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12. 12 1면 2236호) /238
-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 미등록 신분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12. 1 4 2면 2237호) /242
-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12. 21 1면 2242호) /251
-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12. 27 2면 2245호) /258

▷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 공청회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7. 13 2면 2134호) /20
-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7. 19 1면 2137호) /25
- <만화사랑방> 새 외국인노동자 대책은 그물 없는 안전망?!(7. 19 1면 2137호) /25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7. 23 1면 2139호) /29
-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10. 25 1면 2202호) /160

외국인

-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 국가인권위, 출입국 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8. 13 1면 2154호) /59
-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9. 28 1면 2184호) /123
- 남편사별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 한국정부도, 중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11. 13 2면 2215호) /190

난민

- 베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11. 21 1면 2221호) /201

재외동포

-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10. 18 1면 2197호) /150
-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12. 4 2면 2230호) /224

여성

-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10. 24 1면 2201호) /158
- <해설> 호주제와 현 호적제의 문제(10. 24 1면 2201호) /158

▷ 성폭력 · 성희롱/ 가정폭력

-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7. 25 1면 2141호) /33
-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10. 1 1면 2185호) /125
-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10. 26 2면 2203호) /163
-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도 간접피해 인정(11. 27 1면 2225호) /209
- 집회 참가 여성 성추행 당해 - 전주노동사무소의 공개사과 촉구(11. 29 2면 2227호) /217

▷ 성매매

-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7. 5 2면 2128호) /8
-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12. 7 2면 2233호) /231
-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12. 12 1면 2236호) /238

▷ 여성노동권

- 출산휴가 · 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10. 31 1면 2206호) /168

어린이 · 청소년

- <육아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7. 2 2면 2125호) /2
-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7. 4 1면 2127호) /5
-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10. 11 2면 2192호) /141
- 한국정부는 답하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이행 관련 질문 제기(11. 12 2면 2214호) /188
-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12. 5 1면 2231호) /225
-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12. 7 2면 2233호) /230
-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 미등록 신분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12. 14 2면 2237호) /242
- 성실 · 솔직 · 투명하게 임하라 - 유엔 심사 앞두고 ‘유엔아동권리협약 간담회’ 열려(12. 25 2면 2244호) /256
-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12. 27 2면 2245호) /258

▷ 아동학대/체벌

-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 개선 심포지움 -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10. 26 2면 2203호) /163

▷ 청소년 노동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7. 25 2면 2141호) /34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② 부당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7. 26 2면 2142호) /36
- <기획>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③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7. 27 2면 2143호) /38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 :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10. 1 2면 2185호) /126
-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10. 11 1면 2192호) /140
-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 공청회…‘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10. 19 2면 2198호) /153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11. 13 1면 2215호) /189

장애인

-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10. 25 2면 2202호) /161
- <클릭! 인권정보자료>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10. 30 1면 2205호) /166

▷ 이동권

-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 피해 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7. 2 1면 제2125호) /1
-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없다?(7. 30 1면 2144호) /39
- 서울시청, ‘공개사과 못 한다’ -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 요구 농성(8. 1 1면 2146호) /43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8. 8 1면 2151호) /53
- 이동권보장 요구, 장애인 단식 시작 -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8. 13 1면 2154호) /59
-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8. 21 2면 2158호) /68
-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8. 24 1면 2161호) /73
-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8. 27 1면 2162호) /75
- 17일째 ‘장애인 이동권’ 쟁취 단식농성 중인 최재호 씨를 만나 - “성과 못 내더라도 후회없이 싸울 생각”(8. 29 2면 2164호) /80
-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4명, 시의회 기습 시위(8. 30 2면 2165호) /82
-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 · 피해보상조치 필요”(9. 4 1면 2168호) /87
-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 최재호씨 실신 - 베스타기 행사 중…박경석 대표도 상태 악화(9. 7 2면 2171호) /94
-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 일관(9. 12 1면 2174호) /99
-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9. 17 1면 2177호) /106
- 이동권연대 엄태근 국장 체포 - 장애인단식농성 38일 경과(9. 19 2면 2179호) /111
-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 승리 -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9. 19 1면 호외) /112
- 결연한 의지 다진 기자회견 -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요지(9. 19 2면 호외) /113

·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관련 투쟁 및 국가인권위원회 무기한 단식 농성 경과(9. 19 2면 호외)	/113
·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영상보고서(9. 28 2면 2184호)	/124
·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 관련기관, 1년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10. 23 1면 2200호)	/156
·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기로(10. 31 1면 2206호)	/168
·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11. 20 1면 2220호)	/199
·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 국가인권위, 발산역 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11. 22 2면 2222호)	/204

▷ 교육권

·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7. 27 1면 2143호)	/37
·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10. 5 1면 2188호)	/132
·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10. 23 1면 2200호)	/156

탈북자

·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 정착 어려움(12. 3 1면 2229호)	/221
---	------

동성애자

·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 27 2면 2143호)	/38
·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8. 15 1면 2156호)	/63

성전환자

·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공청회(7. 11 2면 2132호)	/16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11. 6 1면 2210호)	/178

노숙인

·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11. 13 1면 2215호)	/189
--	------

국제

· <‘국제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연대 한발짝 앞으로(8. 29 2면 2164호)	/80
---	-----

유엔인권기구

· <논평>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쳐(7. 27 1면 2143호)	/37
· <클릭! 인권정보자료> 「유엔과 인권 꾸러미」(8. 22 1면 2159호)	/69

·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에 청원 - 10기 한총련 3백여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8. 24 2면 2161호)	/74
· <용어설명> 청원제도란?(8. 24 2면 2161호)	/74
· <클릭! 인권정보자료>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9. 25 1면 2181호)	/116
·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10. 11 2면 2192호)	/141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11. 9 2면 2213호)	/185
· 한국정부는 답하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 이행 관련 질문 제기(11. 12 2면 2214호)	/188
·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12. 21 1면 2242호)	/251
·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유엔 심사 앞두고 ‘유엔아동권리협약 간담회’ 열려(12. 25 2면 2244호)	/256

국제형사재판원(재판소)

· 국제형사재판소 ‘역사적’ 출발 -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7. 3 2면 2126호)	/4
·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협안(7. 6 2면 2129호)	/10
·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10. 8 1면 2189호)	/134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10. 16 2면 2195호)	/147
·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11. 6 2면 2210호)	/179
· ICC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11. 9 3면 2213호)	/186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투명해야(11. 23 2면 2223호)	/206
·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12. 4 1면 2230호)	/223

지역인권상황

▷ 아시아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9. 24 2면 2180호)	/115
·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12. 14 2면 2238호)	/244
·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12. 18 2240호)	/248

▷ 미국

·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협안(7. 6 2면 2129호)	/10
·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10. 8 1면 2189호)	/134
·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10. 9 1면 2190호)	/136
· <만화사랑방> 아프간 공격 1년, 부시 이라크 공격 준비(10. 11 1면 2192호)	/140

특별주제

국가기구와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 관료저항에 막힌 과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양콜공연(11. 21 2면 2221호) /202
- 국가인권위 한 둘…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11. 28 2~3면 2226호) /212~213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12. 19 2면 2241호) /250
- 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12. 19 2면 2241호) /250

▷▷ 권고 및 구제 결정 관련

-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 국가인권위, 출입국 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8. 13 1면 2154호) /59
-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9. 26 2면 2182호) /120
- 논리에 주눅 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10. 10 2면 2191호) /139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10. 17 2면 2196호) /149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10. 24 2면 2201호) /159
-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10. 24 2면 2201호) /159
-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11. 7 2면 2211호) /181
-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남편사별 중국동포 -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11. 7 2면 2211호) /181
- 고문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11. 26 1면 2224호) /207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기타

-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8. 21 2면 2158호) /68
-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9. 17 1면 2177호) /106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9. 26 2면 2182호) /119
-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공개 안건(9. 26 2면 2182호) /119
- 전원위원회 비공개 안건(9. 26 2면 2182호) /120
-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9. 26 2면 2182호) /120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증상모략” 반발(10. 3 2면 2187호) /130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10. 3 3면 2187호) /131
-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 방패(10. 24 2면 2201호) /159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10. 31 2면 2206호) /169
-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 인터뷰(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문제)(10. 31 2면 2206호) /169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12. 5 2면 2231호) /226
-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12. 5 2면 2231호) /226
-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12. 11 2면 2235호) /237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12. 12 2면 2236호) /239
-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12. 12 3면 2236호) /240
-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12. 17 1면 2239호) /245
-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12. 21 1면 2242호) /251

▷ 국가정보원

-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협조했다”(8. 2 1면 2147호) /45
-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8. 7 1면 2150호) /51
- 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 “국정원 환골탈태 기회 스스로 포기”(8. 8 1면 2151호) /53
-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 “냉전적 국가 신고체제, 대민 불신만 조장”(12. 18 1면 2240호) /247

▷ 경찰

-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7. 3 1면 2126호) /3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그들은 알고 있을까?(7. 9 2면 2130호) /12
-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7. 16 1면 2135호) /21
- <자료>현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8. 2 2면 2147호) /46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8. 6 2면 2149호) /50
- 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배상 판결(11. 8 2면 2212호) /183

▷ 검찰

-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8. 7 1면 2150호) /51
- 의문사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8. 9 1면 2152호) /55
-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9. 26 1면 2182호) /118
-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11. 2 1면 2208호) /174
-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 신문과정 변호사 입장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11. 5 1면 2209호) /176
- 의문사위의 수사제도 개선 권고 중(11. 5 1면 2209호) /176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11. 5 2면 2209호) /177
-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11. 9 1면 2213호) /184
- 고문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11. 26 1면 2224호) /207
-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시행(12. 18 2면 2240호) /248
- 법무부 형법·형소법 개정안 반대 빗발 - 수사편의 위주, 인권보장 뒷전(12. 27 1면 2245호) /257

▷ 법원

-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8. 9 2면 2132호) /56

▷ 군·기무사

-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 당시 보안사 담당자(현 기무사), “자료목록 영구보존”(8. 23 2면 2160호) /72
-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 씨 ‘공개수배’ - 자료제출 거부, 소각 후 참적(8. 31 1면 2166호) /83

-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10. 10 1면 2191호) /139
-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10. 30 1면 2205호) /166
-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워 “신뢰할 수 없다”(11. 29 1면 2227호) /216
-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11. 30 1면 2228호) /218

시설수용자와 인권

▷ 에바다 사건(청각장애아 시설)

- 에바다 민주 이사진, 농아원 진입 - 옛 재단 쪽 직원과 원생, 폭력 행사 되풀이(7. 16 1면 2135호) /21
-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7. 20 2면 2138호) /28

▷ 외국인보호소

-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11. 1 2면 2207호) /172

감옥·유치장 수용자와 인권

-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 법무부 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7. 2 1면 2125호) /1
-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7. 23 1면 2139호) /29
- <논평>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쳐(7. 27 1면 2143호) /37
-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9. 28 1면 2184호) /123
-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10. 29 1면 2204호) /164
-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11. 9 2면 2213호) /185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11. 9 2면 2213호) /185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11. 14 2면 2216호) /192
- 전주교도소,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반입 불허 -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11. 15 2면 2217호) /194
-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11. 16 1면 2218호) /195
-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12. 6 1면 2232호) /227
-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12. 14 1면 2238호) /243

▷ 보호감호제

-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10. 17 1면 2196호) /148
-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11. 1 1면 2207호) /171
-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11. 2 1면 2208호) /174
-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11. 7 1면 2211호) /180
-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11. 9 3면 2213호) /186
-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11. 12 1면 2214호)

-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11. 13 2면 2215호) /190

/187

/190

신자유주의와 인권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11. 19 2면 2219호) /197

▷ 민영화

-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7. 20 2138호) /28

▷ 경제특별구역(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 외국투자기업에 과언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8. 22 2159호) /69
-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8. 29 1면 2164호) /79
-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 민주노총, 균기법 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 촉구(10. 30 2면 2205호) /167
-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11. 1 1면 2207호) /171
-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11. 6 1면 2210호) /178
-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11. 7 1면 2212호) /182
- “경제자유구역법 무효화 투쟁 나설 것” -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11. 9 3면 2213호) /186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 양대노총, 국회앞 1박2일 노숙투쟁(11. 13 2면 2215호) /191
- 경제자유구역=노동착취 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11. 15 1면 2217호) /193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사회단체(11. 19 1면 2219호) /197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범대위(준) 발족 -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11. 27 2면 2225호) /210
- <만화사랑방> 인권대통령이라면 경제자유구역법안에 거부권을!(11. 29 1면 2227호) /216

▷ 자유무역협정 / 농산물 수입개방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 과일 값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10. 18 2면 2197호) /151
-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11. 1 1면 2207호) /171
- “우리 쌀을 지키자” - 여의도별, 십만 농민 합성 가득(11. 13 2면 2215호) /191

미국과 인권

-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협안(7. 6 2면 2129호) /10
-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10. 8 1면 2189호) /134
-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10. 8 1면 2189호) /134
-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10. 9 1면 2190호) /136
- <만화사랑방> 아프간 공격 1년, 부시 이라크 공격 준비(10. 11 1면 2192호) /140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12. 3 2면 2229호) /222
-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12. 4 1면 2230호) /223
-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12. 28 1면 2246호) /259

▶▶ 주한미군과 인권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 미군측 발표 내용은 의문투성이 -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7. 4 1면 2127호) /5
- <만화사랑방>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미군의 '파렴치한 불꽃놀이'(7. 5 1면 2128호) /7
-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 사과(7. 5 2면 2128호) /8
- 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 검찰 출두 안 시켜(7. 9 1면 2130호) /11
- 법무부, 미군에 재판권 포기 요청 -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결치례 검찰 출두(7. 11 2면 2132호) /16
-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7. 25 1면 2141호) /33
-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8. 6 2면 2149호) /51
-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 "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8. 8 1면 2151호) /53
-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10. 5 1면 2188호) /132
-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 각계 분노·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11. 22 1면 2222호) /203
- <만화사랑방> 미군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라네?(11. 22 1면 2222호) /203
-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11. 23 1면 2223호) /205
-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11. 26 1면 2224호) /207
- 분노하는 당신, 행동하라! - 제1차 시국대회, 미군의 무죄평결 관련 범국민 행동지침 발표(11. 28 1면 2226호) /211
-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12. 6 2면 2232호) /228
- 소파개정 촉구, 종교계 기도회 줄이어(12. 10 1면 2234호) /231
-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 14일 '주권회복의 날'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12. 12 1면 2236호) /238
- 중대범죄에 대해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12. 13 1면 2237호) /241
- <만화사랑방> 반미시위 확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12. 13 1면 2237호) /241

과거청산/불처벌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원칙」(10. 3 1면 2187호) /129
-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상) -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10. 23 22일 2200호) /157
-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10. 25 2면 2202호) /161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 '한국전쟁전후 폐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7. 5 1면 2128호) /1
-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7. 6 1면 2129호) /9
- <기획>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①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7. 10 2면 2131호) /14

- <기획>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②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의산역 폭격'(7. 17 2면 2136호) /24
- <기획>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③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7. 24 2면 2140호) /32
- <기획>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④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7. 31 2면 2145호) /42
- <해설> 보도연맹 사건(7. 31 2면 2145호) /42
- <기획>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⑤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8. 7 2면 2150호) /52
- <기획>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⑥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8. 14 2면 2155호) /62
- <기획>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⑦ 산청학살, "지리산 자락에 산 게 죄였다"(8. 22 2면 2159호) /70
-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8. 23 1면 2160호) /71
- <기획>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⑧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이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8. 28 2면 2163호) /78
-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8. 30 2면 2165호) /82
-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9. 3 2면 2167호) /86
- <기획>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현장을 가다 ⑨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9. 11 2면 2173호) /98
-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 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10. 12 2면 2193호) /143
-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 회피 -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11. 6 1면 2210호) /178
-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11. 8 2면 2212호) /183
-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령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11. 21 1면 2221호) /201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11. 26 2면 2224호) /208

▶▶ 삼청교육대

-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8. 1 1면 2146호) /43
-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10. 1 1면 2185호) /125
-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 조사 결과...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10. 2 1면 2186호) /127

▶▶ 의문사

-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7. 13 1면 2134호) /19
-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8. 1 1면 2146호) /43
-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협조했다"(8. 2 1면 2147호) /45
- <만화사랑방> 전두환 납량특집 - "삼청교육대" 관련 진상조사할테니 준비해주세요(8. 2 1면 2147호) /45
-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8. 7 1면 2150호) /51
- 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 "국정원 환골탈태 기회 스스로 포기"(8. 8 1면 2151호) /53
- 의문사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8. 9 1면 2152호) /55
-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9. 5 1면 2169호) /89
-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 씨 사망 -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9. 7 2면 2171호) /95
-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9. 19 1면 2179호) /110
-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 조사 결과...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10. 2 1면 2186호) /127
-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10. 10 1면 2191호) /138
-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10. 16 1면 2195호) /146
-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 의문사위,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 권고(10. 16 1면 2195호) /146

·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10. 19 1면 2198호)	/152	·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8. 9 2면 2132호) /56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12. 11 1면 2235호) /236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8. 20 1면 2157호)	/65	·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8. 27 1면 2162호) /75
·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8. 21 2면)	/68	· <클릭! 인권정보자료>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8. 28 1면 2163호) /77
· <만화사랑방>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한 연장! 권~한 강화!(8. 23 1면 2160호)	/71	·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8. 30 2면 2165호) /82
· <논평>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된다(8. 31 1면 2166호)	/83	·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9. 6 1면 2170호) /91
·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 "이대로 멈출 수 없다"…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9. 17 1면 2177호)	/106	·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9. 12 1면 2174호) /99
·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10. 10 1면 2191호)	/138	·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10. 12 1면 2193호) /142
·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 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10. 11 2면 2192호)	/141	
·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10. 17 1면 2196호)	/148	
· <진영중의 인권이야기> 의문사진상규명 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10. 29 2면 2204호)	/165	
· 사회단체, 의문사법 개정 촉구 -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 권한 부여'(11. 5 1면 2209호)	/176	
·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11. 8 1면 2212호)	/182	
·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 통과 -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11. 15 2면 2217호)	/194	
▷▷ 비전향 장기수 옥사 사건		
·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8. 30 1면 2165호)	/81	
·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위, 비전향 장기수 옥사사건 결정 공표(9. 18 1면 2178호)	/108	
▷▷ 김준배 사건		
·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7. 10 1면 2131호)	/13	· 인권체험하며 생각도 쑥쑥 - 장대비 속, 어린이 인권캠프(8. 9 1면 2152호) /55
· "정윤기 검사의 사건은폐 규탄한다" -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키로(7. 11 1면 2132호)	/15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9. 18 2면 2178호) /109
·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7. 17 1면 2136호)	/23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9. 25 2면 2181호) /117
▷▷ 허원근 사건		
·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 "중대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8. 21 1면 2158호)	/67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10. 5 2면 2188호) /133
·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10. 30 1면 2205호)	/166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10. 18 2면 2197호) /151
·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11. 29 1면 2227호)	/216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⑤ 인권학교 참가, 실천으로 이어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11. 2 2면 2208호) /175
·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11. 30 1면 2228호)	/218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11. 16 2면 2218호) /196
▷▷ 녹화사업		
·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7. 12 1면 2133호)	/17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⑦ YMCA 아동인권센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11. 29 2면 2227호) /217
·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 당시 보안사 담당자(현 기무사), "자료목록 영구보존"(8. 23 2면 2160호)	/72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12. 5 2면 2231호) /226
·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 씨 '공개수배' - 자료제출 거부, 소각 후 잠적(8. 31 1면 2166호)	/83	·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교육은?(12. 17 1면 2239호) /245
· "전두환, 녹화사업 지시" 추정가능 문서 나와 - 의문사위, 전두환 1천만원 과태료 부과(10. 12 1면 2193호)	/142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12. 27 2면 2245호) /258
▷▷ 조작 사건		
▷▷ 조작 사건		
·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8. 9 2면 2132호)	/56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12. 11 1면 2235호)	/236	
▷▷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9. 18 2면 2178호)	/109	
·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9. 6 1면 2170호)	/91	
·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9. 12 1면 2174호)	/99	
·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10. 12 1면 2193호)	/142	
인권교육		
·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7. 10 1면 2131호)	/13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9. 25 2면 2181호)	/117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10. 5 2면 2188호)	/133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10. 18 2면 2197호)	/151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⑤ 인권학교 참가, 실천으로 이어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11. 2 2면 2208호)	/175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11. 16 2면 2218호)	/196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⑦ YMCA 아동인권센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11. 29 2면 2227호)	/217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12. 5 2면 2231호)	/226	
·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교육은?(12. 17 1면 2239호)	/245	
· <기획>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12. 27 2면 2245호)	/258	
평화		
·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7. 9 1면 2130호)	/11	
·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10. 8 1면 2189호)	/134	
·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10. 9 1면 2190호)	/136	
· <만화사랑방> 아프간 공격 1년, 부시 이라크 공격 준비(10. 11 1면 2192호)	/140	
·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12. 28 1면 2246호)	/259	
인권활동가		
·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 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11. 20 2면 2220호)	/200	
· 전국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12. 3 1면 2229호)	/221	

기획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을 가다

- ①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7. 10 2131호)
- ②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의산역 폭격'(7. 17 2면 2136호)
- ③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7. 24 2면 2140호)
- ④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7. 31 2면 2145호)
<해설> 보도연맹 사건(7. 31 2면 2145호)
- ⑤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8. 7 2면 2150호)
- ⑥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8. 14 2면 2155호)
- ⑦ 산청학살, "지리산 자락에 산 게 죄였다"(8. 22 2면 2159호)
- ⑧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8. 28 2면 2163호)

/14

/24

/32

/42

/42

/52

/62

/70

/78

/34

/36

/38

/90

/92

/100

/102~103

/97

/105

/108

/111

/114

/117

/118

/124

/109

/117

-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10. 5 2면 2188호)

/133

-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10. 18 2면 2197호)

/151

- ⑤ 인권학교 참가, 실천으로 이어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11. 2 2면 2208호)

/175

- ⑥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11. 16 2면 2218호)

/196

- ⑦ YMCA 아동인권센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11. 29 2면 2227호)

/217

-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12. 27 2면 2245호)

/258

▶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7. 25 2면 2141호)
- ② 부당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7. 26 2면 2142호)
- ③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7. 27 2면 2143호)

/42

/52

/62

/70

/78

/34

/36

/38

/90

/92

/100

/102~103

/97

/105

/108

/111

/114

/117

/118

/124

/109

/117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9. 26 2면 2182호)

/119

-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공개 안건(9. 26 2면 2182호)

/119

- 전원위원회 비공개 안건(9. 26 2면 2182호)

/120

-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9. 26 2면 2182호)

/120

-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9. 26 2면 2182호)

/120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10. 3 2면 2187호)

/130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10. 3 3면 2187호)

/131

- 논리에 주눅 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10. 10 2면 2191호)

/139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10. 17 2면 2196호)

/149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10. 24 2면 2201호)

/159

-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10. 24 2면 2201호)

/159

- 국가인권위 입구, 잠에일 맞이한 경찰, 방패(10. 24 2면 2201호)!!

/159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10. 31 2면 2206호)

/169

-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 인터뷰(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문제)(10. 31 2면 2206호)

/169

-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구고 빠져(11. 7 2면 2211호)

/181

-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남편사별 중국동포 -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11. 7 2면 2211호)

/181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11. 14 2면 2216호)

/192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11. 28 2~3면 2226호)

/212~213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12. 5 2면 2231호)

/226

-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12. 5 2면 2231호)

/226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12. 12 2~3면 2236호)

/239~240

-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12. 12 2면 2236호)

/239

-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12. 24 1면 2243호)

/253

-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12. 24 1면 2243호)

/253

▶ 쟁점! 주5일 근무제

-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9. 11 1면 2173호)
- ② 총노동시간, 노동자들 등골 훤히다(9. 14 2면 2176호)
-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9. 18 1면 2178호)
-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9. 19 2면 2179호)
-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9. 24 1면 2180호)
-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9. 25 2면 2181호)
-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뱀'?(9. 26 1면 2182호)
- ⑧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9. 28 2면 2184호)

/97

/105

/108

/111

/114

/117

/118

/124

/109

/117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9. 18 2면 2178호)
-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9. 25 2면 2181호)

/14

/24

/32

/42

/42

/52

/62

/70

/78

/34

/36

/38

/90

/92

/100

/102~103

/97

/105

/108

/111

/114

/117

/118

/124

/109

/117

인권하루소식 고정란 및 기타

논평

-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7. 6 1면 2129호) /9
-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7. 13 1면 2134호) /19
-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7. 20 1면 2138호) /27
-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에 부처(7. 27 1면 2143호) /37
-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8. 3 1면 2148호) /47
- 사면의 역설(8. 10 1면 2153호) /57
-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8. 24 1면 2161호) /73
-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된다(8. 31 1면 2166호) /83
-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9. 7 1면 2171호) /93
-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9. 19 1면 2179호) /110
-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9. 28 1면 2184호) /123
- '저항'은 정당하다(10. 5 1면 2188호) /132
- 윤태식과 장세동(10. 12 1면 2193호) /142
-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10. 19 1면 2198호) /152
-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10. 26 1면 2203호) /162
-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11. 2 1면 2208호) /174
-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11. 9 1면 2213호) /184
-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11. 16 1면 2218호) /195
-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11. 30 1면 2228호) /218
-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12. 7 1면 2233호) /229
-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12. 14 1면 2238호) /243
-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12. 21 1면 2242호) /251

인권이야기

▷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7. 2 2면 2125호) /2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 그들은 알고 있을까?(7. 9 2면 2130호) /12

▷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7. 16 2면 2135호) /22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7. 30 2면 2144호) /40
- 어느 사형수 이야기(8. 27 2면 2162호) /76
-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9. 24 2면 2180호) /115
-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10. 22 2면 2199호) /155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8. 6 2면 2149호) /50
-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8. 20 2면 2157호) /66
- 감추어진 세계(10. 8 2면 2189호) /135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8. 13 2면 2154호) /60
- 함께 갑시다(9. 10 2면 2172호) /96
- 대~한민국 :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10. 1 2면 2185호) /126
-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10. 29 2면 2204호) /165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9. 17 2면 2177호) /107
-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인권의 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10. 15 2면 2194호) /145
-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11. 19 2면 2219호) /198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11. 26 2면 2224호) /208
- 인권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한다(12. 24 2면 2243호) /254

▷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 폭력과 미국의 책임(12. 3 2면 2229호) /222

▷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12. 10 2면 2234호) /232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 왜 나는 큰 일에만 분노하는가(12. 17 2면 2239호) /246

만화사랑방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미군의 '파렴치한 불꽃놀이'(7. 5 1면 2128호)	/7
· 검찰, 한총련 의장 또 기소(7. 12 1면 2133호)	/17
· 새 외국인노동자 대책은 그물 없는 안전망?(7. 19 1면 2137호)	/25
·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 판결, 그러나 국보법에 의한 자기검열 계속(7. 26 1면 2142호)	/35
· 전두환 납량특집 - "삼청교육대' 관련 진상조사할테니 준비해주세요"(8. 2 1면 2147호)	/45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위험하긴 마찬가지~(8. 9 1면 2152호)	/55
· 강제해산 철거 때마다 보이는 '용역...깡패'(8. 15 1면 2156호)	/63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한 연장! 권~한 강화!(8. 23 1면 2160호)	/71
· 이명박 시장님 ~ 이런 사진도 좀 찍어보시죠?(8. 30 1면 2165호)	/81
· 열심히 일한 당신~ 외국인노동자 떠나라?!(9. 6 1면 2170호)	/91
· 공무원노조를 '노조'라 부르지 마라?(9. 19 2면 2179호)	/111
· 경찰의 지문날인 통계자료 왜곡 - "경찰들만 '지문날인'하면 되겠구만~!"(9. 27 1면 2183호)	/121
· 아프간 공격 1년, 부시 이라크 공격 준비(10. 11 1면 2192호)	/140
· 수배전단에 주민번호를 공개하다니!(10. 18 1면 2197호)	/150
· 아프리카 민속공연단 초청 대한민국 특별공연! - 대운동장 풀뽑기 강제노역(10. 25 1면 2202호)	/160
· 국회를 향한 '힘읍고 빼읍는 민초들'의 분노(11. 1 1면 2207호)	/171
· 검찰 피의자 고문사망, 청송보호감호소 열악한 처우, 경찰 시민오발 사망(11. 8. 1면 2212호)	/182
· 뿌리채 뽑히는 농심...(11. 15 1면 2217호)	/193
· 미군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라네?(11. 22 1면 2222호)	/203
· 인권대통령이라면 경제자유구역법안에 거부권을!(11. 29 1면 2227호)	/216
·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12. 6 1면 2232호)	/227
· 반미시위 확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12. 13 1면 2237호)	/241
· '집시법'은 고무줄이야~(12. 19 1면 2241호)	/249
· 2002 인권 10대 뉴스(12. 28 2면 2246호)	/260

인권정보자료

·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7. 10 1면 2131호)	/13
· 「벼랑 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7. 17 1면 2136호)	/23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7. 24 2140호)	/31
·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7. 31 1면 2145호)	/41
·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8. 8 1면 2151호)	/53
· 「서준식 옥중서한 1971~1988」(8. 15 2면 2156호)	/64
· 「유엔과 인권 꾸러미」(8. 22 1면 2159호)	/69
·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 - 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으랏차차 힘찬 인권이야기」(9. 4 1면 2168호)	/87

·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9. 25 1면 2181호)	/116
·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원칙」(10. 3 1면 2187호)	/129
·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10. 9 1면 2190호)	/136
·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10. 16 2면 2195호)	/147
· 「강제실시 길라잡이 -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10. 24 1면 2201호)	/158
·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11. 6 2면 2210호)	/179
·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11. 13 1면 2215호)	/189
· 「형평운동의 재인식」(11. 20 1면 2220호)	/199
·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11. 27 1면 2225호)	/209
· 정보화시대의 인권① 「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12. 4 1면 2230호)	/223
· 정보화시대의 인권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12. 11 1면 2235호)	/236
·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12. 18 1면 2240호)	/247
·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12. 25 1면 2244호)	/255

인권영화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밝힙니다(9. 3 1면 2167호)	/85
·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영상보고서(9. 28 2면 2184호)	/124
·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10. 15 1면 2194호)	/144
· 세번째 반딧불 신의 아이들(11. 7 1면 2211호)	/180
· <울림>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시작된다(11. 9 2면 2213호)	/185
· 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11. 27 2면 2225호)	/210
·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12. 21 2면 2242호)	/252

주간인권흐름

· 6월 25일 ~ 7월 1일(7. 2 2면 2125호)	/2
· 7월 1일 ~ 7월 8일(7. 9 2면 2130호)	/12
· 7월 8일 ~ 7월 15일(7. 16 2면 2135호)	/22
· 7월 15일 ~ 7월 22일(7. 23 2면 2139호)	/30
· 7월 22일 ~ 7월 29일(7. 30 2면 2144호)	/40
· 7월 29일 ~ 8월 5일(8. 6 2면 2149호)	/50
· 8월 5일 ~ 8월 11일(8. 13 2면 2154호)	/60
· 8월 12일 ~ 8월 19일(8. 20 2면 2157호)	/66
· 8월 19일 ~ 8월 26일(8. 27 2면 2162호)	/76
· 8월 26일 ~ 9월 2일(9. 3 2면 2167호)	/86
· 9월 2일 ~ 9월 10일(9. 10 2면 2172호)	/96
· 9월 9일 ~ 9월 16일(9. 17 2면 2177호)	/107
· 9월 16일 ~ 9월 23일(9. 24 2면 2180호)	/115

· 9월 23일 ~ 9월 29일(10. 1 2면 2185호)	/126
· 9월 30일 ~ 10월 7일(10. 8 2면 2189호)	/135
· 10월 7일 ~ 10월 14일(10. 15 2면 2194호)	/145
· 10월 14일 ~ 10월 21일(10. 22 2면 2199호)	/155
· 10월 21일 ~ 10월 28일(10. 29 2면 2204호)	/165
· 10월 28일 ~ 11월 3일(11. 5 2면 2209호)	/177
· 11월 4일 ~ 11월 11일(11. 12 2면 2214호)	/188
· 11월 11일 ~ 11월 18일(11. 19 2면 2219호)	/198
· 11월 18일 ~ 11월 25일(11. 26 2면 2224호)	/208
· 11월 25일 ~ 12월 2일(12. 3 2면 2229호)	/222
· 12월 2일 ~ 12월 9일(12. 10 2면 2234호)	/232
· 12월 9일 ~ 12월 16일(12. 17 2면 2239호)	/246
· 12월 16일 ~ 12월 23일(12. 24 2면 2243호)	/254

이달의 인권

· 6월(7. 4 2면 2127호)	/6
· 7월(8. 1 2면 2146호)	/44
· 8월(8. 31 2면 2166호)	/84
· 9월(10. 2 2면 2186호)	/128
· 10월(11. 1 3면 2207호)	/173
· 11월(11. 30 2면 2228호)	/219
· 12월(12. 28 3면 2246호)	/261

기타

· 인권하루소식 창간 9주년 축사 - <다산인권> 송원찬, <평화와 인권> 서미숙(9. 7 2면 2171호)	/94
· 인권하루소식 2002 인권 10대 소식 설문지(11. 28 4~5면 2226호)	/214~215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 인권 10대 소식(12. 10 3~5면)	/233~235

<인권하루소식> 합본 19호

펴낸 날 : 2003년 2월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주소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 02-741-5363 / 팩스 : 02-741-5364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ian.net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값 1만원